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정치권 '술렁'

비명 "역동성 회복 계기"·친명 "야권 분열 의도"

국힘, "여야 협치 시작" ... 공식 입장은 자제
비명계, 복권에 "환영" ... 다양성 회복 계기
친명계, '야권 분열' 우려... "친문 구심점 역할"

친문재인(친문)계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은 여야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각에게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관할된다. 야권에서는 계파별로 엇갈린 목소리가 감지된다. 비명계에서는 환영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야권 분열 의도'로 보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규약 국민회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도지사가 비록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질문에 꼭 수석대변인은 "여야 정치인들 중 유죄판결 받았던 인물에 대해서 사면이나 복권을 반대하시는 국민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이 야권 분열의 포석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엔 "모든 걸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끝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져 없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



영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국내로 잠시 돌아왔다.

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 김 전 지사가 말로 정권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

의 복권을 '야권 분열'으로 보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차기 대권을 목표로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한 이 전 대표에게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 전 대표가 밀었던 추미애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의사 표현을 많이 했다"며 "이런 흐름을 볼 때 일부 의원들은 (이 전 대표를) 흔들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원의 중 공천이 안 된 인사들이나 낙천한 인사들 사이에서는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된 지 1년 8개월 만에 파선거권을 되찾게 된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뉴스



이서빈 정책협력관, 천영평 기조실장

도 정책협력관 기조실장 임명

정책협력관 - 이서빈 기조실장 - 천영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책협력관(전문임기제 기급, 3급)에 이서빈(58)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여성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신임 정책협력관의 임기 시작은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 까지다. 이 신임 정책협력관은 전북대학교(석·박사 과정 수료)를 졸업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이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여의도연구원 지역정책지원위원, 새누리당 전북도당 대변인,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대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국민의힘 전북도당 여성위원장 직책을 수행했다. 이어, 신임 기조실장에 천영평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을 임명했다. 천 신임 기조실장은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장,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수집기획과장,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이만호 기자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응치전투 추도 행사가 열린 가운데, 최병관 행정부지사, 유회태 원주군수, 응치전투 참전후손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진왜란 응치전투 추도행사 개최 '살아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국가 사적 지정 후 첫 공식 추도행사... 호국정신 되새겨
전북자치도·원주·진안군 공동 주관... 참전 후손들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원주군, 진안군과 공동 주관하여 도청 공연장에서 '살아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리라'라는 정담 장군의 여록을 슬로건으로 내건 응치전투 추도 행사를 개최했다. 응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호남 방위에 중요한 승리로, 조선군이 육상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다. 이 전적지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선조들의 희생과 후손들이 조상들의 정신을 어떻게 기리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호국선열을 기리는 추도사를 낭독했고,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고인들을 추모했다. 특히, 응치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정담 장군과 황박 장군의 후손들이 행사에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원주군, 진안군과 함께 매년 이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임진왜란 응치전적지가 국가 사적

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원주군, 진안군과 함께 추도 행사를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업적을 기억하는 선양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진왜란 응치전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응치전적지가 호국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원주군, 진안군과의 협업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가 사적으로 승격된 임진왜란 응치전적지의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 정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친환경에너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협약 체결

호남권 10개 발전 관계기관과 에너지기상 업무협력 시작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9일, 친환경에너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상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10개 관계기관과 체결하였다. 최근 급변하는 날씨와 발전설비의 증가 등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과 민간에서는 발전단지 현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예측에 도움이 되는 상세하고 정확한 기상예측정보를 요

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 중심의 기상정보를 서비스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상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실증지역의 일사량과 풍력 터빈 높이의 풍향·풍속 등 기상관측자료를 통해 상세 기상 기술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에너지 실증지역

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에너지 기상 업무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 실증지역인 전라권의 발전 관계기관들은 기상관측 장비의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협조, 태양광과 풍력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과 에너지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자문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상 분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환영"

전병헌 새미래 대표 "소수 야당 의견 받아들여 줄 것 같아 뿌듯"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전병헌 새미래 대표가 "환영하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대표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함께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정치권 정적지해의 체제적인 연구와 활용,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는 "이재명 당의 정성호 의원의 복권 반대와 고민정 의원의 외로운 지

지 반응을 보여 슝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모처럼 절대다수 야당보다 절대 소수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앞서 전 대표는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포털 사이트 여론을 조작했다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12월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남은 형만 집행 정지돼 현재는 영국 유학을 거쳐 독일 등지에서 머물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 여파

민주, "광복절 경축식 불참 검토"

혁신당·진보당은 불참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예정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논란에 휘말린 김형식 고신대 석좌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할 것 등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불참을 선언했다. 이혜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뉴스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광복절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었다"며 "확정하진 않았지만 '친일 논란'이 불거진 김형식 관장을 임명하는 등 윤정권의 친일 행태에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불참을 검토 중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관장의 임명이 독립운동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사 참석과 별도로 광복절 전날인 14일에 독립기념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교수는 평소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결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참 예정이어서 친일 밀정 정권이 주최하는 8·15 경축 행사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혹시라도 광복회 차원의 행사가 마련된다면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겠다"고 했다. 혁신당은 조만간 '김형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보당은 경축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확히 말하면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현 사태를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는 물론 보존부 장관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뉴스

민주 전현희 의원, 권익위 간부 사망에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조사를 담당할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라고 했다. 전 후보는 이날 오후 네 입장문에서 "윤 정권이 강력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해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은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날을 세웠다. /뉴스

연구비 유용 혐의 국립군산대 총장 구속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 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뉴스